

“호남에선 불 안나나?” 국힘 의원 국회 본회의장서 발언 파장

도내 정치권 “지역 모독” 분노

민주 도당 “재난 피해 회화화 규탄… 반인륜적 언사” 의원직 사퇴 등 촉구

남관우 전북시군의장협의회회장 “자연재해라도 입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선 불 안 나나?”라는 충격적인 망언을 한 데 대해 도내 정치권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서소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이 “재난 피해를 회화화한 것은 물론, 호남 전체를 모독한 망언으로 전북도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영 대변인은 “재난 앞에 국민은 모두가 하나다. 지난 경북 산불 피해 당시 전북도민 역시 한마음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향해 조롱을 던진 것은 피해 주민을 두 번 상처 입히고, 호남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는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반국가적, 반인륜적 언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전북도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호남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정치 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호남의 역사를 모독한 이번 망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에게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먼저, 전북도민과 모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의원은 국민을 모욕한 책임을 지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도 사과와 재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회장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니, 호남에서도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이런 발언은 참으로 저급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연재해마저 지역감정을 통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천안공노할 작태를 보였다”며 “호남인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 호남은 자연재해라도 입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발언의 당사자가 어느 지역구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망언을 한 의원을 석고대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망언 사태는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정치권 전반의 자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권희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에게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먼저, 전북도민과 모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의원은 국민을 모욕한 책임을 지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도 사과와 재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회장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니, 호남에서도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이런 발언은 참으로 저급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연재해마저 지역감정을 통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천안공노할 작태를 보였다”며 “호남인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니 호남은 자연재해라도 입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발언의 당사자가 어느 지역구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망언을 한 의원을 석고대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망언 사태는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정치권 전반의 자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권희성 기자

이재명정부 정부조직 재설계 앞장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5년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구조나 정파적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개혁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유능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임박에 나섰다. 실제 윤 의원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며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반대와 이익제기,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민생과 개혁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의지로 끝내 관철시키며 결실을 맺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생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내달 31일까지

행감 도민제안 창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문승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 제안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를 비롯해 방문, 우편, 이메일(surja2847@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문승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 내실 있는 감사를 만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편의시설 등 민원 해결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편의시설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즉항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 승강장의 경우 기존 의자 사용 불편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도동동 부영1차 아파트 입구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실 수 있는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민원들을 전달받은 이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교통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살폈다. 한 주민은 “주민의 불편함을 적극 경청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따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정부 정보시스템 중단 비상대응체계 가동

전북자치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따라

전 시군 긴급 회의 열고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사고대책본부장)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중단 사태에 따른 도내 정보시스템 가동 상황과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화재는 26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서비스와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문자발송연계 시스템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회의를 통해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연, 공문서 발송 지체, 긴급 재난 상황 전파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도와 시군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 분야별 대체 수단을 마련해 행정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에는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와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각 기관 간 공문서 발송은 전산 팩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공직자통합메일이 접속 불가할 경우 내부 메신저와 긴급 연락망을 통해 업무를 이어가

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부24 온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NDMS(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전자팩스, PS-LTE, 카카오톡 단체 채널 등을 활용해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를 마련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은 차질 없이 유지하고 있다. 소방의 경우 해양경찰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조회 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매체(문자, 영상) 신고시 112로 연계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급을 위한 병원선정은 카카오톡 등 임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복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논의 본격 시동

민주 호남발전특위, 전북지역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 도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지역(이하 호남특위 전북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남특위 전북회의의 조직을 구성하고, 전북의 미래 발전 과제 발굴 및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호남특위 전북회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의 수석부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신영대 국회의원, 이성운 국회의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행

정언론학부 이동기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호남특위 전북회의는 전북의 핵심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호남권 연계 협력 대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미래 성장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 재개정 과제까지 도출해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청,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활동’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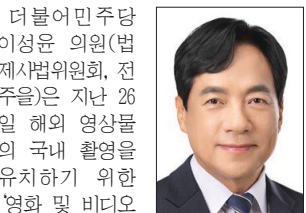
민주 도당, 추석 맞아

민생 현장서 소통 행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은 28일 오후, 군산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구세군군산목양원(원장 최석주)’과 청년발달장애인 자립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대표 김한희)’를 잇달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현장엔 이원택 도당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 시도의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개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 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과제 등 의견을 나눴다. /이만호 기자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목적’ 담아

민주 이성운 의원,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은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의 국내 활용을 유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규정, 해외 제작사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일부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졌다. 현행법상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2023년 전주시 영상진

흥 조례를 개정해 영상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외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 환급률 50%, 상한액 100억원 △인도 환급률 30%, 상한액 50억원 △몽골 환급률 30%, 상한액 없음(연간예산 3,500억원)에 비해 한국은 환급률 20%~25%, 상한액 3억원(연간예산 9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가 아시아의 대표 영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반드시 무주에”

무주군의회,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임시회를 열고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은 면적의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경제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턱없이 낮은 인구와 극심한 소득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무주군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주군은 규제를 기회로 승화시켜 굳건히 버텼었다. 세계적인 생태 도시를 꿈꾸며 이를 미래 세대에게 온

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무주군민에게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대응과 농어촌 발전 도전에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무주군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송진선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주민 여론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회에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부위원장 이영희 부의장)’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